

2021년 10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6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10 (Vol.76)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최완영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년 10 (Vol.76)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적용
국토부, 도심 빈집 정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위한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화 추진계획」 수립
제주도,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13일 공고

6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행복청, 상생협력 사업으로 초광역 특화 도시 선도
여가부,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확정, 22년 12곳 신규 설치
국토부, 운전자 편의·지역발전 위해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국토부, 생산성·안전성 높이는 K-스마트 건설기술적용 사업 시행

서울시, 서서울호수공원 보행약자도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 재탄생
서울시, 주거지 골목길에서도 전기차 충전 '가로등형·볼라드형 충전기' 도입
부산시, 부울경 순환형 경제구조 주도하는 부울경 최초 업사이클 센터 유치
대구시,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26개소에 스마트가든 올해 안 조성완료
대전시, 공동주택 갈등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본격 지원
광주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선도사업 점검회의' 첫 개최
경기도,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평택에서 추진
충북도, 문체부 체육시설 건립·보수 공모 사업 14개소 선정
전북도,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활용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3

농진청, 식물-공기청정시스템 개발, 공공 협력사업으로 도서관에
수직정원 조성
서울시, 한옥건축 활성화 위한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전북도, 주거복지팀 개편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10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0.07.



국토교통부는 위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 -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여 관리비에 대한 감독 강화 -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

* 60㎡는 주택법령·건축법령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 중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정책과. 2021.10.13.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발코니	- 설치 제한	- 제한없음(단, 발코니 확장 불가)
바닥난방	- 85㎡이하만 바닥난방 가능	- 제한없음
전용출입구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필요	- 제한없음
전용면적	- 안목치수로 산정	- 중심선치수로 산정

국토부, 도심 빈집 정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급협력과. 2021.10.14.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 운영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도시경관건축과. 2021.10.07.

진행

건축
정책

환경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위한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화 추진계획」 수립

노인복지과. 2021.10.25.



부산시는 어르신들이 15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정보화 교육 추진, 경로당 시설현대화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시 전체 경로당의 기본 운영 현황을 조사해 경로당 통합DB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신뢰 가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시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13일 공고

도시계획재생과. 2021.10.13.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도는 2018년에 수립한 전략계획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앞당겨 재정비했다.

비전으로 ‘도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생의 선순환 도시재생’이 설정됐고, 일자리 재생, 주민주도재생, 역사문화 재생, 주거지 재생, 복지 재생 등 5개 전략 및 18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특히 도시재생 예정지역인 활성화 지역의 경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맞춰 15만~30만㎡ 규모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11곳에서 25곳으로 변경·지정됐다. 또한 활성화 지역 별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골목상권, 빈집, 우수건축자산,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조사한 후 재생 방향을 도출했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행복청, 상생협력 사업으로 초광역 특화 도시 선도

광역상생발전기획단. 2021.10.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지난 9월 30일(목)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2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은 지난 19년 8월에 선정한 1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의 연장선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포함하는 총 7개의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행복도시권 가속기 산학 협력 지구(ACE) 구축, ②행복도시권 금강수변축 특화관광지역 조성, ③행복도시권 관광도로 도입, ④행복도시권 기후위기 대응 통합 민관협력 구축, ⑤광역 수소충전소 협력 배치, ⑥행복도시권 엠아이씨이(MICE) 산업 육성, ⑦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확충

여가부,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확정, 22년 12곳 신규 설치

가족정책과. 2021.10.07.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지역 내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161억 원(개소당 8억 원~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부산 연제구의 경우 폐가주택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우수사업 계획(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도 포함)에 선정됐다.

국토부, 운전자 편의·지역발전 위해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도로관리과. 2021.10.25.



국토교통부는 '20년과 '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 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생산성·안전성 높이는 K-스마트 건설기술적용 사업 시행

기술정책과. 2021.10.28.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 기반의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건설자동화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자동화 시범사업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LH공사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3D BIM 설계를 기반으로 모든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되도록 하였으며, 드론측량을 활용하여 기성 검사, 토공량 산정하는 등 스마트 기술도 구현하게 된다. 또한, 5G 통신을 통해 건설정보관제센터에서 건설장비(전기)를 무인·원격으로 조정하는 MG (Machine guidance)·MC (Machine control) 기술로 토석 23만m³을 절취·운반·성토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LH공사는 건설자동화 기술의 실증·연구와 함께 스마트기술 상설 시연장을 6개월('21.11.1 ~ '22.4.30) 동안 운영하여 일반인들도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을 관람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서울호수공원 보행약자도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 재탄생

공원녹지정책과. 2021.10.07.

완료

도시
정책

환경

서울시가 서서울호수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여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누구나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주요 공간의 보행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고 이외 일부 시설물들도 함께 정비하여 공원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주요 정비 사항은 출입구 및 보행로, 유도 및 안내 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며, 이외에도 공원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기타시설들도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 특히, 공간 및 동선체계에 있어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신규 동선을 구축하여 모두가 이용 가능한 순환동선을 확립하고자 했다.

서울시, 주거지 골목길에서도 전기차 충전 `가로등형·볼라드형 충전기` 도입

기후변화대응과. 2021.10.12.

진행

도시
정책

환경

서울시가 빌라, 연립주택 등 주거지 밀집 골목길에서도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혁신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같은 슬림한 외형의 50kW 급속 충전기로, 한 시간 만에 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어, 대부분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등부터 방범 CCTV, LCD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기능도 결합돼 있다. 그리고 ‘볼라드형 충전기’는 면적이 약 0.06㎡ 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완속충전기다.

또한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 생산과 공급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복합 전기차 충전소’도 현재 2개소(양재-동남권, 양천-서남권)에 이어, '22년까지 2개소 이상을 확대 설치한다.

부산시, 부울경 순환형 경제구조 주도하는 부울경 최초 업사이클 센터 유치

자연순환과. 2021.10.21.



부산시는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사업’이 환경부의 2022년 국고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억2천4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22억2천4백만 원을 보태 총 44억4천9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업사이클센터는 폐기물 재활용과 재사용, 자원화·처분, 매립 등 10여 개 관련 시설과 기업 등이 집적되어있는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안에 건립되어, 산학과 연계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전시·판매 등 부산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구현하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2024년 5월까지 센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26개소에 스마트가든 올해 안 조성완료

산림녹지과. 2021.10.25.



대구시는 실내에 적합한 식물과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을 도입해 치유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인 스마트가든* 26개소 조성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5개소는 조성을 이미 완료했으며 11개소는 조성 중이다.

* 실내 유희공간인 회의실, 휴게실 등에 IOT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자동관수, 생장조절, 조명관리 등 식물의 생육을 관리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

올해는 중구 노인복지관, 동구 나비누리관 등 공공시설 12개소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서구 소재 제라(주), 달성군 소재 (주)평화오일 찹쌀엿 등 산업단지 14개소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11월중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향후 스마트가든 방문객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공기정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선호식물을 조사한 후 도서관, 문화관, 지하철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공동주택 갈등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본격 지원

주택정책과. 2021.10.15.



대전시는 ‘행복한 공동체 아파트,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개월간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3개분야 총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하여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는 사업
이번 공모사업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 분야에 선정된 14개 단지에는 최대 2,100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에 선정된 8개 단지에는 각 250만 원, 단지내 교통 안전시설 지원 분야 19개 단지에는 최대 9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선도사업 점검회의’ 첫 개최

에너지산업과. 2021.10.19.



광주시는 19일 ‘2045 에너지자립도시 선도사업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등 에너지 자립도시 선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은 광주지역에 4년간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 이동형 에너지 공유차량,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각 사업간 유기적 연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규제자유 특구, 에너지 정보 플랫폼, 에너지 파크 운영, 시 전역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에너지 자립 도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평택에서 추진

도시재생과. 2021.10.06.



경기도가 지역 홍물로 전락한 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로 재탄생 시키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곳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내용이다. 매입된 빈집이 철거되면 동두천시에서는 공공 아동 돌봄시설을 조성하고, 평택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곳은 2023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한편, 도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빈집의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9개시*에서 빈집 86호 정비를 목표로 13억2,500만 원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16개 시에서 115호 안팎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원, 용인, 이천, 고양, 시흥, 양주, 안양, 의정부, 오산

충북도, 문체부 체육시설 건립·보수 공모 사업 14개소 선정

체육진흥과. 2021.10.07.



충북도는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공모에 신규사업 14건*이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기금) 87억원을 확보했다.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5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9건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지원해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노후 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환경기초시설 유희부지 활용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자연생태과. 2021.10.13.



도시
정책

전라북도는 13일 환경기초시설 내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덜고,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도 생산하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15개소 유희지에 2,70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총 1,308톤의 CO₂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6개 시·군, 12개 환경기초시설에 총발전 용량 1,809kW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해 약 연간 1,139.67톤의 CO₂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7개소가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시설도 지속 추진중에 있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완료

진행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농진청, 식물-공기청정시스템 개발, 공공 협력사업으로 도서관에 수직정원 조성 도시농업과. 2021.10.26.

완료

건축
정책

환경

농촌진흥청은 도서관 안에 수직 정원*을 조성한 결과, 공기 질 개선을 비롯해 쾌적함과 집중력 면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수직정원(바이오월): 식물의 잎과 배양토(흙)의 미생물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공기청정기 시스템으로, 2013년 농촌진흥청이 개발

연구진은 전북혁신도시 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말 전북 완주군 콩쥐팍쥐도서관 1층 책카페에 스킨답서스, 산호수 등 공기정화식물 336본(그루)을 넣어 수직정원을 조성했다.

이어 도서관 이용자 80명을 대상으로 수직정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운영 시간의 공기 질을 9개월 동안 확인한 결과, 수직정원을 조성한 공간의 초미세먼지가 9.4%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수직정원 조성 공간이 4.0%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직정원 조성 후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과 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식물·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수직정원 조성
(2020. 11. 17)



수직정원 활용
(2021. 10. 13)

서울시, 한옥건축 활성화 위한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한옥정책과. 2021.10.05.



건축
정책

서울시가 한옥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옥 건축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 서울시 내의 한옥을 대상으로 10월 31일(일)까지 우수한옥 인증 신청을 받는다.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2016년부터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75 개소가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2001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포함),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 한옥이 신청 대상이며, 우수한옥으로 인증되면 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고, 시설 정기점검과 소규모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매년 1회 한옥 전문가의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손상된 목재 교체 및 지붕보수 등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수선 조치해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 선정된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한옥 12 개소에 대한 사진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전북도, 주거복지팀 개편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주택건축과. 2021.10.15.



주택
정책

전라북도가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확보·배치하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간 전북도의 주거복지 정책은 팀별로 분산 추진되었으나, 이번 개편과 함께 주거복지 사업을 주거복지팀으로 일원화하였다. 사회복지직을 주거복지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여 관련 부서 및 시군과 유기적 업무 소통으로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